

---

산불대응 및 통상 · AI 지원을 위한

# 추가경정예산(안)

---

'25. 4.

기 획 재 정 부

# 목 차

I. 추경 편성방향 .....	1
II. 재정총량 변화 .....	2
III. 추경안 주요 내용 .....	3
1. 재난·재해대응 .....	4
2. 통상·AI 지원 .....	6
3. 민생 지원 .....	10

## I. 추경 편성방향

### □ [추진배경] 최악의 산불 피해복구와 통상전쟁 등에 대응 시급

- 최근 영남지역의 초대형 산불이 역대 최악의 피해 야기
  - ⇒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, 정부의 재해·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 투자 필요
- 전례 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·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, 글로벌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도 격화
  - ⇒ 관세 피해·수출기업의 부담 경감을 지원하고, AI·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필요
- 내수 회복 지연으로 서민·소상공인 등의 어려움 가중
  - ⇒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필요

### □ [기본방향] 필수소요 중심 12.2조원 규모 추경 편성

- (규모) 12.2조원(총 14개 부처, 93개 사업)
- (내용) ①재해·재난 대응 3.2조원, ②통상·AI 지원 4.4조원  
③민생 지원 4.3조원, ④기타(국제행사, 국채이자 등) 0.2조원
- \* 외화 표시 외국환평형채권 발행한도 23억불 증액 포함
- (사업) 시급한 현안과 직접 관련되고, 효과성이 높으면서,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선별
- (재원) 세계잉여금\*·기금자체자금\*\* 등 가용재원 4.1조원, 추가 국채발행 8.1조원

\*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0.2조원, 한은잉여금 초과수납분 1.2조원

\*\* (여유자금) 소진기금 1.5조원, 주택기금 0.2조원 등 (채권발행) 중진기금 0.7조원

## Ⅱ. 재정총량 변화

□ [총지출] 본 673.3 → 추경 685.5조원(전년대비 +4.4%)

○ (총수입) 본예산 대비 1.3조원\* 증가(651.6→652.8조원)

\* 한은잉여금 초과수납분, 지방채 이자수입 등

○ (총지출) 본예산 대비 12.2조원 증가(673.3→685.5조원)

□ [재정수지] 본 △73.9 → 추경 △84.7조원 (GDP대비 △2.8→△3.2%)  
[국가채무] 본 1,273 → 추경 1,279조원 (GDP대비 48.1→48.4%)

○ (관리재정수지) 본예산 대비 △10.9조원(△73.9→△84.7조원),  
GDP 대비 △0.4%p(△2.8%→△3.2%)

○ (국가채무) 본예산 대비 +6.0조원\* (1,273.3→1,279.4조원),  
GDP 대비 +0.2%p(48.1%→48.4%)

\*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원 활용, '24년 결산 결과 반영 등에 따라 국가  
채무 증가폭이 관리재정수지 적자 확대 폭 하회

(단위: 조원)

	'24년 본예산	'25년		B-A*
		본예산(A)	추경(B)	
◇ 총수입 (증가율)	612.2 (△2.2)	651.6 (6.4)	652.8 (6.6)	+1.3
◇ 총지출 (증가율)	656.6 (2.8)	673.3 (2.5)	685.5 (4.4)	+12.2
■ 통합재정수지 (GDP대비,%)	△44.4 (△1.8)	△21.7 (△0.8)	△32.6 (△1.2)	△10.9 (△0.4%p)
■ 관리재정수지 (GDP대비,%)	△91.6 (△3.6)	△73.9 (△2.8)	△84.7 (△3.2)	△10.9 (△0.4%p)
■ 국가채무 (GDP대비,%)	1,195.8 (47.4)	1,273.3 (48.1)	1,279.4 (48.4)	+6.0 (+0.2%p)

\* 억원 단위로 산출(표에서 제시된 천억원(소수점 첫째 자리) 기준 계산시와 일부 차이)

### Ⅲ. 추경안 주요내용

기본 방향	총 12.2조원	
	◇ 우리경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①재해·재난 대응, ②통상·AI 대응, ③민생 지원 등 3대 분야 집중 투자	
주 요 내 용	① 재해·재난 대응	+3.2조원*
	▶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	1.4조원
	▶ 재해·재난 예방·대응력 강화	1.7조원
	▶ 노후 SOC 개량 등 안전투자	0.2조원
	② 통상 및 AI 지원	+4.4조원*
	▶ 통상리스크 대응(관세, 공급망, 고용불안)	2.1조원
	▶ AI 생태계 혁신	1.8조원
	▶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	0.5조원
	③ 민생 지원	+4.3조원*
	▶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	2.6조원
	▶ 영세·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	1.6조원
	▶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	0.2조원
	④ 기타(국채이자, 주요행사 개최 등)	+0.2조원

\* 억원 단위로 산출한 규모(표에서 제시된 하부 카테고리(천억원 단위) 합과 일부 차이

## 1

## 재해·재난 대응

+3.2조원

- ◇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**재해대책비 보강**,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
- ◇ **재해·재난 예방 및 대응** 관련 장비·인프라·기술 고도화

## ① 신속한 산불 피해 복구 지원

+1.4조원

- (**피해복구**) 금번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 재해·재난대책비 부족분 보강(0.5→1.5조원)

\* '25년 잠정 복구소요 1.2조원 기준(정확한 소요는 복구계획 확정시 변동 가능)

	재해대책비	행안부	환경부	산림청
추경(안)	+9,460억원	+6,600억원	+1,120억원	+1,740억원
現 가용재원*	(2,440억원)	(1,300억원)	(330억원)	(810억원)**

\* 재해대책비 잔액 및 이전용 가능재원

\*\* 산림청 외 기타부처 가용재원도 포함

- (**일상회복**) 피해주민 대상 주택복구 용도 저리 대출(400호)을 지원하고, 피해지역 인근 신축 매입임대 1천호 공급(0.2조원)
- 산불 피해 심각 지역에 특별도시재생 사업 지원(**신규** 80억원)
- (**지방재정 보강**) 산불 피해지역 지방채 2,000억원 인수

## ② 재해·재난 예방·대응력 강화

+1.7조원

- (**사전탐지**) AI 감시카메라, 고성능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산불 신속 탐지 역량 및 조기 진압 기반 고도화(+68억원)
- (**진화역량**) 산림헬기 6대 **신규** 도입('27년까지 총 2,640억원 투자), 중·대형 물버킷 확충(+30개) 등 공중 진화능력 보강(+1,077억원)
- \* 산불 대응 헬기 대형화·최신화 통해 '31년까지 총 담수능력 2배 수준 확대
- 다목적 산불진화차 확충(+48대), 전국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(1,199개소)로 지상 진화역량 강화(+232억원)
- 산불특수진화대 위험수당 신설(4만원/월 **신규**), 산불진화대 보호장비 일제 교체(1.5만명분), 현장 출동인원 회복차량 도입(5대) **신규**

- **(산림인프라)** 산불 진화 인력·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한 **산불진화임도·간선임도 2배 수준 투자 확대(+1,008억원)**

구분	사업명	'25년 지원계획		비 고	
		본예산	추경(안)		
사전 탐지	▶ AI 감시카메라	-	30대 <b>신규</b>	국유림 '25~'29년 총 +150대 (산림감시율 50% 달성)	
	▶ 산불감시용 고성능 드론	-	45대 <b>신규</b>	관리소(32개) 당 3대 배치	
진화 역량	▶ 산림헬기	2대	8대(+6)	신규 +4대, 노후대체 +2대	
	▶ 다목적 산불진화차	16대	64대(+48)	관리소당 2대 배치	
	▶ 산불 진화대	최신안전장비	-	1.5만명 <b>신규</b>	전체 인력 지원
		회복지원차	-	5대 <b>신규</b>	지방청(5개소) 당 1대 배치
		특수진화대 위험수당	-	월 4만원 <b>신규</b>	
임도	▶ 산불진화임도(신·증설)	405km	755km(+350)	산불진화임도	
	▶ 간선임도	80km	180km(+100)	2배 수준 확충	

- **(R&D)** AI·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**산불 예측·탐지 능력 및 진화기술 고도화 지원(신규 117억원)**

\* 딥러닝 기반 산불 확산속도 예측, 군집 드론 활용 야간 모니터링 강화 등

- **(예비비)** 산불 추가 복구 소요와 여름철 태풍·집중호우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**예비비 보강(+1.4조원)**

### 3 항공 및 노후 하수관로·도로 안전투자 **+0.2조원**

- **(항공)** 전 공항시설 특별점검을 거쳐 **활주로 이탈방지 장치, 방위각 시설 등 안전시설 보강(총 2,548억원, 433억원 **신규**)**

활주로 이탈방지장치	조류탐지레이더	방위각 시설	기타시설 개선
4개 공항	전 공항(15개)	6개 공항	전 공항(15개)
'25~'27년 1,276억원	'25~'27년 735억원	'25년 209억원	'25~'26년 328억원

- **(노후 SOC)** 싱크홀과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화되거나 위험한 **하수관로·도로 조기 개보수 지원(+1,259억원)**

- **(하수관로)** 지반침하 고위험지역 노후관로 조기교체(서울 27개소 **신규**, 기타 38개소) / +556억
- **(도로)** 노후 포장도로 전면 정비(+503km), 싱크홀 탐사구간 2배 수준 확대 / +703억

## 2

## 통상 및 AI 지원

+4.4조원

- ◇ 관세 피해 관련 정책금융 25조원 확충 및 수출바우처 2배 이상 확대
- ◇ 고성능 GPU 1만장 확보, 고급인재 양성 2배 확대 등 AI 생태계 혁신
- ◇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필수 인프라·금융 지원 대폭 강화

## 1 통상 리스크 대응

+2.1조원

## 【 관세피해·수출기업 지원 : +1.8조원 】

- (금융지원) 기업들의 유동성 경색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금융 기관을 통한 특별자금 25조원 확충(+1.5조원)
  - (대출) 美 상호관세로 직·간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저리 대출 15조원 추가 공급(+1.0조원)
  - (보증·보험) 관세 피해 중소·중견기업 특례보증 및 조선업 RG 등 수출 유망분야 보증보험 등 총 10.2조원 공급(+0.5조원)
  - (펀드) 위기 기업의 사전·사후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'기업구조혁신펀드\*'를 5,000억원 규모로 조성(+500억원)

\* 지분투자(경영권인수, 단순지분매입), 대출 지원 등

(단위: 조원)

		공급규모	재정지원	지원내용
합 계		+25.4	(+1.5)	
대출	수은	+10.0	(+0.2)	· 수출기업 위기극복 지원 패키지 10조원 <sup>신규</sup>
	산은	+4.0	(+0.1)	· 관세피해 기업 저리대출 프로그램 4조원 <sup>신규</sup>
	중진공	+0.7	(+0.7)	· 한시 긴급지원자금 0.1 <sup>신규</sup> , 신시장진출자금 등 0.6조원
보증 보험	신보·기보	+4.5	(+0.2)	· 위기기업 특례보증 <sup>신규</sup> (신보 3.3, 기보 1.2조원)
	무보	+5.7	(+0.3)	· 수출 애로기업 특례보증 및 보험 2.4조원 · 중소 조선사 RG 0.3조원, 방산 수출지원 3.0조원
펀드	자산관리공사	+0.5	(+0.05)	· 관세피해 업종 기업구조혁신펀드 0.5조원 <sup>신규</sup>



○(수출바우처) 관세 피해 우려 수출 중소·중견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물량을 2배 이상 확대(3,290→8,058개사)

- 피해분석·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관세대응바우처 신설(+0.1조원)

	본예산	추경	지원내용
관세대응바우처 <sup>신규</sup>	-	2,128개사	관세피해 대응, 생산거점 이전 컨설팅 등 4개 분야 500여개 신규서비스 제공
중소기업 전용 수출바우처	3,290개사	5,930개사	해외인증, 물류, 보험 등 14개 분야 8,000개 서비스

○(국내투자) 관세 피해가 인정되는 유턴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비율 +10%p 상향 및 외국인투자 지원 확대(+396억원)

## 【 핵심품목 공급망 안정 : +0.2조원 】

○(공공비축\*) 최근 중국 수출통제 조치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6개 핵심 광물\*\* 조기 비축(0.2→0.4조원)

\* 13개 핵심광물에 대해 '31년까지 평균 100일분까지 확대 계획

\*\* 희토류(72→100일), 리튬(90→100일), 몰리브덴(40→95일), 마그네슘(87→100일) 등

○(국내생산) 비축,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(예: 무수불산, 흑연)의 국내 생산비용 보조사업\* 신설(<sup>신규</sup>146억원)

\*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수입단가의 차액을 2년간 한시 지원(보조율 70%)

## 【 고용충격 선제 대응 : +0.1조원 】

○(위기기업) 통상 위기로 인한 고용 불안 우려에 대비 '고용유지 지원금' 요건 완화\* 및 지원인원 확대(2.4→3.0만명, 703→814억원)

\*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 완화, 산업위기 선제대응을 요하는 경우 등도 포함 검토

○(지역일자리) 통상·산업 여건변화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'고용 둔화 대응지원\*' 사업 신설(<sup>신규</sup>300억원)

\* 고용현안 업종(자동차, 철강, 건설업 등) 밀집지역 일자리 창출·유지 지원(8개소, 30~50억원)

## 【 외환시장 안정 】

○(외평채 확대) 환율 급변동 등 시장 불안시 적기 대응하기 위해 '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' 발행한도를 +23억\$(12→35억\$) 확대

\* 외화 외평채 발행한도 확대분만큼, 원화 외평채 발행한도 축소

- (컴퓨팅 인프라) 연내 최신 고성능 GPU 1만장 확보(신규 1.5조원)
  - '23년말 국내 AI컴퓨팅 성능의 7배 이상\*을 추가 확보하여, 세계 최고 수준 LLM 학습에 필요한 GPU 연산 역량 구축
  - \* ('23.말) 0.134EF(H100 2천장) → ('25) +1.0EF(100경번/초 연산, H200 등 1만장 추가)
- (K-LLM) AI 정예팀\*을 선발, GPU(2,000장) 임차 및 데이터 구매비용을 지원하여 세계 선도 LLM 개발 뒷받침(신규 0.2조원)
  - \* 공모를 통해 민간 AI기업 컨소시엄 복수 선발(선정기준 등 검토 중)
- (인재) 석박사급 이상 인재양성 2배 확대(+1,650명, 연 총 3,300+a명)
  - (최고급) 기업의 해외 최고급 수준의 AI 연구자 유치를 위해 인건비·체제비·연구비(20억원 한도) 지원(5명, 신규 50억원)
  - (고급) 박사후연구자를 국가대표급 인재로 성장시키는 AI 스타 펠로우십 확대 및 과기원 집단·융합연구 신설(+445명, 330억원)
  - (초급) AI 대학원(10개) 정원을 2배 늘리고, 석·박사과정 재학생 대상 기업-대학 공동 연구를 확대(+700명, 135억원)
  - (AI 챔피언) 도전적 AI 과제를 해결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승팀에게 최대 30억원 연구비 지원(500명, 신규 100억원)
- (자금·사업화) AI 분야 유망 중소·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AI 혁신펀드 규모를 2배 이상 확대(900→2,000억원)
  - AI 기업의 R&D를 지원하는 'AI 전용 TIPS' 도입(50개사, 신규 100억원)
- (AI반도체 실증) 국산 NPU를 활용한 LLM 추론서비스 테스트가 가능한 대규모 '클러스터형 실증 프로그램' 신설
  - \* (기준) 사업자당 70억원 지원(6.6PF) → (신규) 사업자당 360억원(120PF)
  - 초기 AI반도체 기업에 소주기 지원(설계 SW 바우처→시제품·양산품 제작→검증 장비) 체계를 마련하고, 해외실증도 2배(4→8건) 확대

### 3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제고

+0.5조원

- (인프라) 용인·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적기 조성을 위해 전력망 지중화 사업(총 1.8조원)의 기업부담분 70% 국비 지원(신규 0.1조원)

\* 기업이 기투자한 금액은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

-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전력·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·지원한도 대폭 확대(0.03→0.14조원)

지역	현 행	개 선
지원비율	15~30%	30~50%
지원한도	최대 500억원	최대 1,000억원(투자규모 100조원 이상 단지)

- (공급망) 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 품목·전략물자\*를 생산하는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한 소재·부품·장비 투자보조금 신설(신규 0.1조원)

\* 첨단전략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 품목 56개 및 전략물자 41개 품목 대상

- 입지·설비 신규 투자규모의 30~50% 지원(건당 150억, 기업당 200억 한도)

지역	중소기업	중견기업
비수도권	50%	40%
수도권	40%	30%

- (금융지원) 금년 공급목표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반도체 설비 투자 저리 대출프로그램 4.3→7.7조원으로 확대(+0.2조원 추가출자)

- '25~27년간 총 공급규모도 17 → 20조원까지 확대

- (인재) 반도체 교육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반도체아카데미를 비수도권까지 확대(기존 수도권 2개소 → 비수도권 2개소 추가)

- (공동장비) 고가의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팹리스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 장비 2종 신규 구축(대당 약 12억원)

## 3

## 민생 지원

+4.3조원

- ◇ 소상공인 대상 **50만원 크레딧 지원** 및 정책자금 2.5조원 확충
- ◇ 전통시장·골목상권 등의 매출 신장을 위해 '**상생페이백**' 신설
- ◇ 저소득 근로자, 최저신용자 등 **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자금** 확대

## ①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

+2.6조원

- (**부담경감 크레딧**)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명에게 영업비용 경감을 위한 **최대 50만원\*** 크레딧 지원(**신규** 1.6조원)
  - \* 소상공인 1인당 월평균 영업비용(109만원)의 절반 수준 경감 가능 / 한시
  - 50만원 범위 내에서 공과금 및 보험료에 자유롭게 활용
- (**정책자금**) 소진기금 융자 및 지역신보 보증 **2.5조원 확충**(+0.8조원)
  - 창업초기·신용취약 소상공인 2만명에 **융자 0.5조원** 확대
  - 코로나 이후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정부 출연을 확대하여 **보증여력 2조원** 보강(+0.3조원)
- (**신용카드**) 중신용(舊4~7등급) 소상공인 대상으로 **6개월 무이자 할부**를 지원하는 **1,000만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**(**신규** 0.1조원/한시)
  - \* 마이너스 통장과 달리 금융권 총부채(DSR)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 활용

	융 자(소진기금)	보 증(지신보)	무이자할부 카드
공급규모	+0.5조원 (3.8 → 4.3조원)	+2.0조원 (41 → 43조원)	+0.7조원 <b>신규</b>
(재정지원)	(+5,000억원)	(+3,334억원)	(+1,314억원)

- (**재도전 지원**)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및 재기 사업화 (경영진단, 재창업자금 등)를 지원하는 **희망리턴패키지 확대**(+494억원)
  - \* 점포철거비(3→4만명), 재기사업화 지원(2,500→2,750명)

## ② 영세 사업자 매출기반 확충

+1.6조원

- (상생페이백)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\*에게 사용한 카드소비 증가액(전년대비)의 20%를 최대 30만원(월 10만원限) 환급(신규 1.4조원)
  - \* 대형마트·백화점, 유흥·명품, 온라인 거래(일부), 자동차 등 제외 / 한시
- 추가 소비 환급 효과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환급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
- (공공배달앱) 소상공인의 매출신장과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이용시에 할인 지원(신규 650억원)
  - \*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3번 주문시 1만원 할인 지원
- (취약상권 환급) 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시, 사용액의 10% 환급행사 실시(+0.1조원 / 한시)
  - \* ('24추석 → '25설) +15%p 추가 환급 시행 결과 디지털상품권 사용 +91.8% 증가
- (키오스크 개발) 장애인들도 불편함 없이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기술개발 지원(신규 92억원)

## ③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

+0.2조원

- (금융 취약계층) 저소득 청년·대학생, 최저신용자 대상 맞춤형 정책자금 +2,100억원 추가 공급(12.3→19.3만명)
  - \* (햇살론유스) 306→456억원, (최저신용자 특례보증) 560→925억원
- (취약근로자)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인원 확대(10.5→11.5만명, 0.5→0.6조원)
  - 저소득·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 공급 확대(1.8→2.1만명)
  - \* (저소득) 915→1,064억원, (산재) 143→209억원, 용자한도 상향(2→3천만원)